

# 모심의 살림의 노 길

## 이슈 진단

식량위기시대, 자유무역주의 한계

## 분야별 동향

농업·먹거리 | 경제·생활 | 사회·환경 | 정치·사회운동

## 살림의 말

'매장'에 관한 명상

## - 목 차 -

### 이슈 진단

|                         |   |
|-------------------------|---|
| 식량위기시대, 자유무역주의 한계 ..... | 1 |
|-------------------------|---|

### 분야별 동향

#### [농업·먹거리]

|                                                    |    |
|----------------------------------------------------|----|
| • 한국 푸드마일리지 증가세, 점점 멀어져가는 생산과 소비의 거리 .....         | 6  |
| • 2012년을 도시농업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변화와 노력들 .....        | 7  |
| • 곡물 생산 및 가격 불안정에 대비한 사료 자급화 노력 .....              | 7  |
| •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에 따른 변화와 과제들 .....                   | 8  |
| • 식물 신품종 보호법 제정과 시장과 기술의 경쟁에 노출된 종자 .....          | 9  |
| • 인도 농민들의 자립을 위한 나브단야의 종자독립(Seed Freedom) 운동 ..... | 10 |
| • 일본의 집락영농(集落營農) 정책을 통한 농촌 공동체 살리기 .....           | 11 |

#### [경제·생활]

|                                           |    |
|-------------------------------------------|----|
| • 유럽 경제를 흔들고 있는 금융위기와 해법을 둘러싼 갈등 .....    | 13 |
| • 저성장 체제의 장기화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 ..... | 14 |
| •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 활동 규제를 둘러싼 갈등과 과제 .....  | 16 |
| • 또 하나의 공유경제 모델, '소셜다이닝'과 '일일 셰프' .....   | 17 |
|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둔 각 영역별 준비 상황 .....        | 18 |
| • 일본 협동조합계의 '협동조합헌장' 초안 정리 소개 .....       | 19 |

#### [사회·환경]

|                                                 |    |
|-------------------------------------------------|----|
| • 성과보다 한계와 과제를 드러낸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 ..... | 21 |
| •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변화 .....             | 22 |
| •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 에너지 산업계의 변화된 흐름 .....           | 23 |
| • 에너지 위기 시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 노력이 필요 .....     | 24 |

#### [정치·사회운동]

|                                              |    |
|----------------------------------------------|----|
| • 한·일 군사협정과 동북아 평화문제 .....                   | 26 |
| • 끊임없이 불거지는 지리산 '케이블카' 및 '댐' 건설 논란과 갈등 ..... | 27 |
| • 4대강 사업의 완결판? 두물머리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 .....        | 27 |
| • 우리나라의 원전 재가동 움직임과 탈핵(탈원전) 관련 동향 .....      | 28 |
| • 일본 사회 시민들의 탈핵(탈원전) 활동 .....                | 29 |

### 살림의 말

|                                             |    |
|---------------------------------------------|----|
| '매장'에 관한 명상 - 파는 곳과 나눔터 사이, 한살림매장의 의미 ..... | 31 |
|---------------------------------------------|----|

## 식량위기 시대, 자유무역주의 한계

### ● 기상이변과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른 식량위기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

-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인 미국이 1956년 이후 최악의 가뭄과 기록적 폭염을 겪으면서 국제 곡물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음
- 미국은 세계 옥수수 수출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등 최대 곡물수출국인데, 이번에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유례없는 이상 고온과 가뭄이 10월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미 농무부는 내년까지 옥수수 수확량 예측치를 12% 줄이고 재고량 예측치도 37% 하향 조정한다고 밝힘.
-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0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는 옥수수와 대두 가격이 톤당 각각 322달러와 645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밀 가격도 20일 사이 69달러 오름.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스탄 등의 곡물생산국들도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남미 곡창지대도 가뭄 피해로 밀과 콩 등의 작황이 좋지 않아, 식량수급 불안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번 국제곡물 가격의 급등에는 '공급' 측면의 불안정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2007-2008년 식량위기 때 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음
- 5년 전 식량위기 때 10억 명 이상이 굶주림을 겪었고, 방글라데시, 아이티 등 30여개 저소득 국가들에서 식량 소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 당시 식량위기는 중국과 인도, 개도국들의 곡물수요 급증과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량 증가, 곡물시장에 대한 투기자본 개입 등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 미국 경우 바이오연료 생산에 옥수수 소비량의 30%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런데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식량위기는 수요를 넘어 생산량 자체의 위축과 감소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세계은행은 2000년부터 30년 동안 곡물 생산량은 50%, 육류 생산량은 85% 늘어야 세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함.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2050년까지 91억 명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식량생산을 70%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
- 하지만 세계 농업생산량의 증가율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데다, 식량수급은 세계적으로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고, 식량가격 급등 현상의 주기도 점점 단축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세계적 경기침체로 각국별로 저금리 정책을 펼치자 국제 투기자본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곡물 선물(先物)시장에 뛰어들어 농산물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높음.

- 결국 식량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소비 국가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 실태와 문제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 식량자급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식량수급의 불안정은 국민의 생존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6.7%로, 쌀을 제외하고 옥수수과 밀 등의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매년 옥수수 900만t, 밀 300만t, 콩 100만t 등 1,500만t을 수입함으로써 연간 5조원이 넘는 돈이 곡물수입에 사용되고 있음.
- 국제곡물가 상승은 생산자들 특히 수입곡물사료 의존도가 높은 축산 농가들의 생계를 위협할 전망이다, 경제위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소비자 생활인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식품관련 물가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유난히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식량자급 기반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가뭄이 지속된 5월 이후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급속히 오르고 있음. 6월 중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 물가가 지난해 6월보다 11% 상승하여,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2%와 비교해 볼 때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특히 높음.
- 우리나라의 5월 식품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올라 OECD 회원국 중 칠레(6.7%) 아이슬란드(6.6%)에 이어 3번째로 높게 나타남.
- 이런 가운데 식량의 생산 기반인 농지는 갈수록 감소되고 있음. 각종 도시화와 개발로 우리나라 농경지는 1980년 220만 헥타르에서 2011년 170만 헥타르로 줄어들어, 약 30년 만에 전체적으로 약 22.7%, 연간 0.75%씩의 농경지가 감소해 옴.
- 작물 재배 품목 또한 식량작물에서 수익성 위주의 것으로 전환되면서 농지 단위 면적당 칼로리 공급 능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음. 농진청은 성인 1인당 하루 필요 칼로리(3천 kcal)를 기준으로 농지 1헥타르당 인구부양 능력을 쌀 20.4명, 고구마 25.1명, 사과 8.6명, 배추 7명, 돼지고기는 1.2명, 소고기는 0.3명으로 발표.
-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1년 7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자급률 제고방안을 발표함.

## ● 농업 희생을 대가로 한 자유무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 FTA 추진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우리나라 정부
- 한-EU FTA(2011.7.1.) 및 한-미 FTA(2012.3.15.)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총 8건의

FTA 발효로, 칠레, 싱가포르, EFTA(4), 아세안(10), 인도, EU(27), 페루, 미국 등 45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음.

- 앞으로 중국, 일본 등과 FTA를 체결할 경우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9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장밋빛 전망을 무색하게 만든 한·EU FTA 1년의 성과와 과제
- 7월 2일로 한·EU FTA 체결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진단해 본 결과 추진 명분으로 내세웠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적었던 것으로 확인됨.
- 정부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5.6% 성장하고, 일자리는 25만개가 창출되며,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3억6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 하지만 작년 7월 한·EU FTA 발효 후 지금까지 1년 동안의 결과는 정부의 기대치를 완전히 벗어났음. FTA 발효 전과 비교해 수출은 12.1% 감소했으며, 무역흑자도 140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EU산 농식품 수입액은 26억3천만 달러로 23.9% 급증한 반면, 수출 액수는 3억5천만 달러로 5.8% 증가하는데 그침.
- 정부는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를 무역 흑자폭의 감소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EU는 FTA 체결 후 한국으로의 수출이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증가했음.
- 여기에도 FTA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이익 챙기기로 해당 품목의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일까지 발생함.
- 앞으로 더욱 거세질 FTA 체결의 후폭풍
- FTA 발효 체계의 특성상 매년 단기적으로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될 경우 그 피해는 점점 더 누적되어 앞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농식품부는 한·EU FTA 발효 후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5년차 때 1천127억 원에서 10년차에 2천565억 원으로 약 두 배 늘어나고, 15년차에는 3천172억 원으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처럼 정부도 FTA 추진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산품과 서비스 등 2, 3차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해 창출된 이익이 농업 분야의 피해보다 더 많다는 것이 FTA 추진의 논리임.
- 하지만 10-15년 후 관세의 전면 철폐로 국내 농업이 완전히 시장의 경쟁체제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대한 대책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결국 환경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의 폭이 매우 큰 데다 생존과 밀접한 식량이 생산과 공급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식량위기 시대를 준비하고 넘어서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식량위기 해결을 가로막는 농업 자유무역주의
- 세계적인 식량위기 문제에 있어 농산물 수출국들이 주도하는 '농업 자유무역'은 큰 장애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음. 우리나라의 FTA 체결 당사국 가운데 농산물 주요 수출국들이 많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임.
- 세계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WHO)가 2002년 구성한 공동 연구기구인 '개발을 위한 농업기술과 과학에 대한 국제 평가'(IASTD)는 보고서를 통해 (개도국) 농업시장이 기본적인 조건과 토대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 경쟁에 개방되는 것은 빈곤퇴치와 식량안보, 환경보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함.
- 따라서 이 보고서는 "식량시장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각국의 식량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어떤 나라도 (식량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자원을 낭비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농업 자유무역주의에 경고를 보내고 있음.
-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자급 정책이 가지는 한계
- 정부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과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2009년 6월부터 10개년 기본 계획으로 추진하는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해외 식량기지 건설을 통해 2018년까지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수입곡물의 10%를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해외농업개발에 나서는 민간기업에 연간 총 200-300억 원을 지원해오고 있음.
-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세계적인 곡물 수급불안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전문가들은 특히 세계적 식량위기라는 비상 상황에서는 해외농업개발로 확보된 농산물에 대한 국내 반입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음.
- 식량 문제에 대한 자본과 기술의 지배와 식량주권에 대한 위협
- G8은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45개 다국적 기업들과 손잡고 '식량영양안보 신통맹'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신젠타, 아처앤다니엘스, 듀폰 같은 농산복합체와 네슬레, 펩시 같은 다국적 식품유통회사들은 GMO의 보급 확대, 다국적 농기업이 주도하는 유통망 확대, 시장에 기반한 영양개선 사업들을 식량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품종개량, 화학비료 및 농약의 과다사용 등에 기반한 녹색혁명 방식은 식량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농업의 운명을 초국적 농기업들의 손에 맡기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유기농', '소농', '공동체' 방식을 통해 지역을 단위로 생태적 안정과 식량생산, 빈

곤해결, 동물복지 등을 실현해가면서 농업과 식량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밑으로부터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업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전환을 위한 노력
- 식량위기 시대를 맞아 관세철폐와 무역장벽 허물기를 통한 '시장'의 자유화가 가진 문제점을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식량생산과 공급의 토대가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생태학적 도전은 경제 논리로 획일화 된 풍요와 빈곤의 구분의 틀을 바꿔내고 있음.
- 농업은 식량생산이라는 기본 가치는 물론 먹거리안전, 고용창출, 농촌 활력증진과 지역 자립, 동물서식지제공,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보존 및 관리,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복합적인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올해 3월에 발표된 지속가능한 농업과 기후변화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안보 실현"에서는 세계 각국과 지역사회에 다음 7가지 내용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음.

첫째, 식량안보(food security)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세계와 각국 정책에 통합시킬 것

둘째, 향후 10년 내에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체계에 대해 지구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투자할 것

셋째, 온실가스 배출 등 농업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면서 농업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강화시킬 것

넷째, 기후변화와 식량 불안정에 가장 취약한 영역과 해당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할 것

다섯째, 기본적인 영양공급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습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량 접근과 소비 패턴을 새롭게 만들 것

여섯째, 식량체계 즉 농작물의 생산과 수확, 저장, 수송, 가공, 조리, 배출 등 전 과정에서 식량의 손실과 폐기물로의 배출을 줄일 것

일곱째, 사람과 생태적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공유 가능하며 통합적인 정보 체계를 구축할 것

## 분야별 동향 1 농업·먹거리

### ● 한국 푸드마일리지 증가세, 점점 멀어져가는 생산과 소비의 거리

-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물론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1년에 106kg였던 것이 2010년에는 34% 증가한 142kg으로 세계 7위 수준을 기록함.
-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집중호우, 폭염 등의 기상재해 피해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세는 세계 3위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가 높은 데는 푸드마일리지의 크게 증가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음
- 푸드마일리지는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식품 수송량에 수송거리를 곱한 수치로 식품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 지난 5월 국립환경과학원의 푸드마일리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일본, 영국, 프랑스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1인당 푸드마일리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순 위 | 1인 당 식품수입량<br>(kg/인) | 1인 당 푸드 마 일 리 지<br>(t·kg/인) | 1인 당 이 산 화 탄 소 배 출 량<br>(kg·CO <sub>2</sub> /인) |
|-----|----------------------|-----------------------------|-------------------------------------------------|
| 1위  | 한 국 (468)            | 한 국 (7085)                  | 한 국 (142)                                       |
| 2위  | 영 국 (411)            | 일 본 (5484)                  | 일 본 (123)                                       |
| 3위  | 프 랑 스 (403)          | 영 국 (2337)                  | 프 랑 스 (96)                                      |
| 4위  | 일 본 (370)            | 프 랑 스 (739)                 | 영 국 (95)                                        |

- 우리나라는 푸드마일리지 자체는 물론 증가세도 가장 높게 나타남. 지난 2001년 국민 1인당 5,172t·kg였던 것이 2010년에는 37% 증가한 7085t·kg으로 나타남.
- 이처럼 푸드마일리지가 증가한 주된 원인은 곡물, 야채, 과일, 축산물 등 주요 농산물들의 수입량이 FTA 등을 통해 크게 늘어난데 있음.
- 따라서 제철농산물, 지역농산물 이용 등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통해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하고 식량 자급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더욱 힘 있게 펼쳐갈 필요가 있음.

## ● 2012년을 도시농업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변화와 노력들

- 주말농장, 베란다 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수경재배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시농업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
-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도시텃밭 면적은 489ha로 지난해의 104ha에 비해 4.7배가 늘었고, 참여자 수도 3만 8,7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남.
- 서울에는 2012년 현재 108개 농원에 313ha가 도시농업 용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음. 이 외에도 서울시 소재 55개의 복지관, 유아원 등에서 옥상텃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텃밭도 26개교에 67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농업용지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옥상공간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이 가능한 면적이 5,115ha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5월부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도시농업 기반확보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었고,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상자텃밭과 옥상텃밭의 증가 추세를 볼 때 도시농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 한살림서울은 지난 5월 5일 서울시로부터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에 150평을 분양받아 조합원 20세대가 참여해 개인 및 공동체 텃밭을 경작하며 '생산하는 소비자'로서 도시농업에 동참하고 있음.

## ● 곡물 생산 및 가격 불안정에 대비한 사료 자급화 노력

-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곡물 작황이 저조한 데다, 유가 상승과 바이오에너지용 곡물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과 함께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되고 있음
- 정부는 수입조사료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주, 고흥, 정읍, 해남 등 각 지자체에서는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한편, 일부 축산 농가에서는 국내산 조사료의 양과 가격, 품질 등을 문제 삼아 조사료의 수입량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일본의 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들
- 일본 정부는 사료 자급률 목표를 2008년 26%에서 2020년 38%로 늘리고, 식품 부산물의 사료이용 확대 및 식품산업과 축산농가 결합, 음식물 사료화 등을 민간 주체로 실시

하고 있음.

- 특히 음식물 재활용으로 친환경 사료를 만들어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식량자급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09년 3월부터 친환경 사료에 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사료가격 급등에 대비해 배합사료안정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일본 생활클럽생협에 소시지 등을 공급하는 야마가타 현 히라타 목장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한 사료용 쌀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아오모리현 토키와촌에서도 사료용 쌀을 재배해 양계 배합사료에 활용하는 등 각 지역별 사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살림의 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들
- 한살림은 2011년 기준으로 한우와 유기한우에서 각각 24%와 53%의 사료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란계는 8%, 돼지육계 경우는 전량 수입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산사료 자급을 소비자 참여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회원 생협의 국산사료 한우 입식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경종과 축산을 결합하여 유기 순환적인 지역농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또한 쌀보리 공매 등을 통해 사료용 물량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발아보리를 활용한 국산사료 자급력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에 따른 변화와 과제들

- 지난 5월 30일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 관련법 개정으로 그동안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던 인증제가 통합·운영되고, 섬유 등 비(非)식용 유기가공품도 유기식품 등에 포함되어 인증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 재포장하는 사업자도 인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됨.
- 이번 개정으로 2014년부터는 동등성 규정에 따라 외국의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국내와 동등하거나 이상인 수준에서 유기 동등성이 인정되어 수입될 예정임.
- 이에 대해 친환경농업단체 등은 FTA로 국내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국내 친환경농업에 대한 적절한 육성대책도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관련해서 해외 유기가공식품 수입의 확대가 미칠 안전성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이 국내 유기농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것을 둘러싼 논란과는 다른 차원에서, GMO 재배국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의 안

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미국은 GM 농작물 생산과 수출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1994년 처음으로 GMO 제품을 승인했으며, 현재까지 세계 최대 GMO 경작면적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유기 동등성 협약에 따라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식품을 상대국의 유기농 인증절차 없이 'organic' 표기를 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면, GMO 오염에 따른 문제는 관련 작물의 재배를 넘어서 수출, 가공, 수입, 유통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 식물 신품종 보호법 제정과 시장과 기술의 경쟁에 노출된 종자

-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종자의 산업화 및 시장화 흐름
- 인류 공동의 유산이었던 종자(種子)는 20세기 들어서 상업적 육종이 활성화 되고, 1961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창립 이후 육종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종자의 시장화가 진행되어옴.
-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유전공학, 건강식품, 의약품, 신소재, 에너지 분야 등으로 종자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금보다 비싼 신산업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음.
- 현재 세계 종자시장의 70% 이상은 몬산토, 신젠타 같은 초국적 종자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연구개발비만 10억 달러 이상씩 투자하고 있음.
- 한편 IMF 이후 국내 종자회사를 인수합병한 초국적 종자기업이 국내 종자시장의 50%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종자주권을 위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종자 로열티를 UPOV에 가입한 첫해인 2002년에 13억 원에서 2010년에는 218억 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생산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 올해 2012년부터는 UPOV의 규정에 따라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보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로열티 지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종자산업법 개정과 식물 신품종 보호법 제정에 따른 종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로 '종자산업법'을 전부 개정하고, '식물 신품종 보호법'을 공포함.
- 법 개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해외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작물의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국내에서 개발된 신품종의 특허를 인정받아 종자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주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임.
-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 토종종자 보호단체 쪽에서는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서 팔기보다는 우리 종자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로열티를 내지 않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초국적기업들이 종자 육성을 위해 방사선 조사, 유전자 조작 방법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만큼, 종자 육성에 이런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종자에 대한 권리가 생산자 농민이 아니라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음.

## ● 인도 농민들의 자립을 위한 나브단야의 '종자독립'(Seed Freedom) 운동<sup>1)</sup>

- 녹색혁명과 대량생산을 위한 인도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와 문제점들
- 많은 물과 비료를 사용하는 녹색혁명으로 인해 인도 전역에서 농지가 사막으로 빠르게 변해갔고, 소농들은 농업 생산방식의 변화로 비료와 농약, 종자를 구매하기 위해 이전보다 많은 돈을 대출하게 됨.
- 몬산토와 같은 초국적 종자기업들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우량종자를 개발하고 이의 배타적 권리를 바탕으로 인도의 농업 시장에 진출하는 동시에 GMO 종자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인도의 유기농업운동을 이끌고 있는 반다나 시바 박사는 초국적기업들이 제3세계 농민들에 의해 개량되어온 생물자원을 빼앗아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생물해적질'(biopiracy)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함.
- 그녀는 지난 13년간 인도 전역에서 경작 실패와 빚 부담으로 25만 명의 농부가 자살한 비극적 사건의 원인으로 2002년 이래 면화의 대량 생산을 위해 들여온 몬산토의 유전자 조작 BT 면화가 있음을 지목하고 있음.
- 대부분의 영세한 소농들은 빚을 내어 BT 면화 종자를 구매했지만, 면화 해충에 내성이 생기면서 재배과정에서 뿌린 농약과 비료 값이 더해졌고, 이로 인해 농부들은 더 많은 빚을 부담하게 됨. 여기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지난 10년간의 가뭄과 뒤이은 홍수, 국제 면화가격의 급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수많은 농민들이 자살하기에 이름.
-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종자 다양성과 종자 자주권으로 농민들 스스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 나선 인도의 나브단야 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9개의 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브단야는 1984년 반다나 시바가 설립한 곳으로, 종자와 물, 흙을 살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도가 살아갈 방향이자,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믿고 활동하고 있음.
- 나브단야는 지난 30년간 50만 명이 넘는 농부, 학생, 방문객들에게 종자 주권과 유기농업을 교육했고, 토종종자 보존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 내에 65개의 종자 은

1) 이 내용은 이경란 박사(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기획위원)가 인도 나브단야 현지를 다녀와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행 설립을 돕는 등 토종 종자 보존과 유기농업의 실천으로 소농의 자립을 돕고 생물다양성과 지구 환경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있음.

- 현재 나브단야는 델리에 사무실과 조그마한 유기농 가게, 식당들을 두고 있으며, 델리에 서 북쪽에 있는 우타찰주 더하라둔에는 시범농장과 농민교육장을 운영하는 비자 비드야피스가 있음. 비자 비드야피스에는 전통농업을 현대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의 농민출신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전 세계에서 젊은 인턴과 자원활동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반다나 시바는 지난 6월 브라질 리우+20 회의에 참가하여 종자 다양성의 확보를 포함하는 지구의 권리로서 '종자독립(Seed freedom)'을 제안함. 종자독립은 간디의 1930년 '소금 행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영국 정부가 소금 생산을 독점하자 인도 민중들에게 직접 소금을 생산할 것을 제안한 불복종운동의 경험을 살려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농부들의 종자주권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음.

## ● 일본의 '집락영농'(集落營農) 정책을 통한 농촌공동체 살리기

- 2005년 농가 인구수가 200만호 이하로 떨어진 일본은 해마다 농지가 감소하고 농업생산자가 고령화되는 등 전반적인 농업 구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집락영농(마을영농)'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집락영농은 이미 70년대부터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 마을 단위로 시도되어온 것으로, 비용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기 위한 대규모 집단영농의 한 형태임.
- 일본에서는 고도경제성장시대를 지나 저성장사회로 넘어오면서 지가 상승의 혜택이 사라지고, 지방경제의 쇠퇴와 과소화, 공동화 등으로 농지 가격이 하락하여 농지 소유 비용이 매년 높아져 왔음.
- 이런 가운데 농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지역농업 운동으로 집락영농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음.
- 집락영농은 각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운영형태별로 보면 농가나 생산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 및 시설을 집단 구성원이 공동 이용하는 '공동이용형', 구성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생산조직이 이용권을 부여 받아 농작업을 하는 '수탁형', 조직구성원이 공동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생산판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은 조직에서 공동으로 계산하는 '협업경영형'으로 나뉘볼 수 있음.
- 집락영농은 개별소유와 개별관리라는 자작농 방식을 넘어서 농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농업의 구조를 만드는 데 특징이 있음
- 지역의 노동력, 농지, 지역자원, 기계 및 설비, 재원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상호 보충하는 자원집약형이면서, 소유에 있어서는 개별적이지만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협의를 지향하는 협동농업 형태가 집락영농 임.

- 집락영농은 고령으로 농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농지소유자들에게 임대 수익을, 농업규모를 확장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는 영농규모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이나 귀농인에게는 그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생산물의 일부는 지역에서 자체 소비하고, 남은 생산물은 외부로 판매하거나 공동작업장에서 가공하여 잼이나 간식거리 등으로 판매하는 등 마을 전체가 협력하여 운영해가면서 소농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령화와 상속 등에 따른 경작포기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음.
- 지난 2007년 일본 정부는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인정농업자(개인, 법인)와 일정요건을 충족한 집락영농만을 토지이용형 농업의 '핵심농'으로 인정하여 정책지원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집락영농의 법인화를 적극 추진함.
- 2005년 1만63개, 2006년 1만481개, 2007년 1만2095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집락영농의 규모도 20ha 이하가 많았지만 2007년 논 경영 소득안정대책으로 집락영농도 지원대상이 된 후 20ha 이상의 집락영농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에서도 집락영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함.
- 지난 7월 19일 경상북도는 일본의 '집락영농' 사례를 지역실정에 맞추어 마을주도형, 농협참여형, 기업주도형으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농지 집적화가 유리하고, 고령농, 소농 등 개별농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마을단위 협의체계 수준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농기계 구입, 공동시설 설치비 등을 3억 원 이내로 지원함으로써, 2020년까지 경지면적의 10%, 2030년에는 15%까지 마을영농을 실현할 계획을 밝힘.
- 한편 농촌 단위에서 집락영농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나가는데 있어, 올해 12월부터 발효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분야별 동향 2

## 경제 · 생활

## ● 유럽 경제를 흔들고 있는 금융위기와 해법을 둘러싼 갈등

- 유로존 경제위기 해결의 구조적 어려움
- 유로존 국가들은 환율이 유로화에 고정되어 있어 국가별 환율정책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는 1997년 금융위기 당시 자국의 환율 절하로 외환보유고를 확충할 수 있었던 동아시아 국가들과 사정이 다른 것임.
- 그리스 경우 채무탕감 조치를 취할 경우 국채의 대부분을 보유한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만큼의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그리스를 포함해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에게는 채무조정을 위해 강력한 긴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국가별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치문제화 되고 있음
- 금융위기 타개책으로 재정긴축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수록 해당 국가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경제적 혼란 속에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그리스는 2차 총선을 앞두고 구제금융 재협상을 요구하는 급진좌파연합과 긴축조치를 지지하는 신민주당이 각축을 벌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음. 결국 6월 17일 선거결과 신민주당의 승리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우려는 가까스로 해소시켰으나,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임.
- 프랑스 경우,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사르코지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이 지난 5월 대통령선거로 연결되어,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의 당선으로 17년 만에 좌파정권이 집권하기에 이룸.
- 유럽 경제위기 해결에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독일 또한 가중되는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수출의 절반 이상을 유로존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재정적 파탄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데다, 유럽 주요 국가들 중 재정 상태가 가장 양호한 만큼, 유럽 경제위기 해결에 독일의 역할의 특히 강조되고 있음.
- 하지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스페인, 이탈리아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현실화 될 경우 독일이 가장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유럽의 경제강국인 독일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여 발표함.

## ● 저성장 체제의 장기화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

-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장기 저성장 기조
- 한국은행은 지난 7월 13일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5%에서 3%로 다시 낮춰 잡아 발표함.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의 경우 1.8%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수출 증가세의 지속적인 둔화와 함께 경제성장을 저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장기화 되고 있는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신흥국가들의 경기 둔화와 함께, 특히 중국이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경제정책 기조를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서민경제의 폭탄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급증 현상
- 2012년 1/4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작년 GDP의 74% 수준인 911조원에 이름. 가계대출 증가로 1/4분기 가구당 평균 이자비용 지출도 18.3%로 증가함.
- 문제의 심각성은 가계 가처분소득보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음.
- 가계부채의 해결 방안으로는 가계소득을 높이거나 금리조정을 통해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음.
-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내수가 위축된 데다 구조적 실업과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쉽지 않은 상황임.
- 또한 과다부채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상환의 부담이 커져 연체율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가계부실이 확대될 수 있고,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조치는 부채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 S&P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정책적 실패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 2007년 부동산 거품 시기에 이루어졌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올해로 집중되어 있고 그 규모가 79조 1천억 원에 이름.
-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배경에는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자율을 낮춰 주택구입 붐을 유도했던 정부의 정책적 실패가 작용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자산가치의 재평가를 통한 대출 만기연장에도 어려움이 있음.

- 여기에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대출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 이들은 은행권에 대한 가계부채 억제 조치에 따라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로 내몰리고 있음.
- 금융기관의 무능력과 생계형 대출의 증가
- 제1금융권의 진입장벽에 막힌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을 찾게 되어 이들의 대출증가 규모가 시중은행 보다 3배에 이름.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183조7천억 원에서 지난 5월에 186조원으로 2조3백억 원이 늘어남.
-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도 늘어나 2008년 9월 130만여 명이 대부업체에서 5조 6천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지난해 6월에는 247만여 명이 8조6천억 원을 대출받음.
- 카드로도 증가 추세로 지난 5월 카드로 신규 이용금액이 1조8160억 원으로 전월 증가 폭보다 8% 이상 높음.
- 이런 가운데 최근에 '시중 은행의 학력 차별형 대출'과 '금융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금융감독 기구의 신뢰성이 불신을 받고 있음.
-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한 우리나라 가계저축률
- 경제적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는 데 있어 가계저축률은 중요함.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하락해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1998년 23.2%였던 것이 2011년 3.1%로 급속히 감소했으며, 올해는 2.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저축률이 급속히 하락하게 된 데는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최근 급증하는 가계 부채의 부담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전체 초중고 학생 약 80%가 사교육을 받으면서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의 6%를 차지하고 있음.
- 불투명한 경기 전망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의 확대
-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상태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이것이 다시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계저축률이 하락한 상태에서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 실물에 묶여 있는 것도 문제임. 지난해 전체가구 평균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73.6%를 차지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변동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음.
- 지방재정의 부실화로 지역의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음
- 올해 정부는 인천시를 포함한 지자체 4곳을 지방재정의 '심각' 상태로, 57개 지자체를 '주의'가 필요한 곳으로 발표함.
- 지방채무는 2008년 19조원에 머물렀던 것이 2010년 말 29조원으로 52.2% 급증함.
- 지자체 재정의 급속한 악화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 지방세수 감소도 있지만, 그동안 지자체장들이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형 개발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추진해서 혈세를 낭비해 온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음.
- 전국 지방공기업 133곳의 부채도 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나 49조4천억 원에 달하며, 이들 지방공기업 부채의 이자를 내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결국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적 압박이 클수록 해당 지역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 활동 규제를 둘러싼 갈등과 과제

- 급속하게 증가하는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자영업과 골목상권을 위협하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국내 유통시장이 개방된 1996년부터 급속히 성장해 온 대형마트는 2000년대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자 2007년부터 SSM 사업에 적극 나섬.
- SSM 점포수는 2007년 354개에서 2009년 650개, 2011년 980개로 급속히 늘어났고, 올해에는 5월까지 1,013개의 SSM이 영업 중임. 이 중 롯데쇼핑(롯데마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리테일(GS슈퍼) 등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의 81.6%를 차지함.
- 하지만 대형마트와 SSM의 급성장은 중소유통업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전통 상권을 위협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 대형마트와 SSM의 부작용이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옴.
-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조례를 통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2011년 6월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다시 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지정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런 가운데 SSM의 편법과 위장 입점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함.
- 결국 논의 과정을 거쳐 작년 12월 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임.
- 이에 따라 전주시 의회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함.

- 영업활동을 제한받은 대형유통업체들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들을 회원으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올해 2월 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함. 또한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 5개 회사는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함.
-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소송에 대해 6월 22일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강제 조치를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동시에 재판부는 해당 판결이 조례의 일부 내용과 조례 개정 절차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결국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볼 때 현재 조례로 대형마트 및 SSM을 규제하고 있는 지자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행정절차상 위법 논란에 휩싸여 관련 소송들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행정절차의 요건을 갖추면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상생발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규제의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또 하나의 공유경제 모델, '소셜다이닝'과 '일일 셰프'

- 밥을 먹으며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는 '소셜다이닝'(Social Dining)이 새로운 공유경제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공간과 음식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형성해가는 소셜다이닝은 '식사'를 매개로 모르는 사람과 친교를 맺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최근 활발하게 퍼져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1인 가구 증가와 바쁜 일상생활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소셜다이닝이 확산되고 있음.
- 소셜다이닝은 채식이나 건강한 식생활을 지향하는 이들의 만남의 장으로서, '이야기가 있는 밥상', '공동체 밥상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 받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는 소셜다이닝을 사업 모델로 한 '집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일일 셰프'(one day chef)가 그날의 요리를 준비하거나 또는 모임 구성원들이 각자 먹을거리를 준비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매개해 주는 방식으로 1인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기존에는 유명인들의 이벤트성 행사로 '일일 셰프'로 참여했다면, 요즘에는 이것이 확장되어 이웃을 위한 재능 나눔의 형태로 진행되기도 함. 정기적으로 특정 '셰프'가 만든 음식을 판매하거나 함께 나누는 모임, 한 개인이 일일 밥집의 호스트가 되어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

- 소셜커머스가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찾아 모였다가 흩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소셜다이닝은 '이야기가 있는 밥상 문화의 복원'을 목표로 하여 식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담은 로컬비즈니스의 모델로서 가능성도 가지고 있음.
- 해외에는 온라인상에 다양한 소셜다이닝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음. 미국 등에서는 '집밥'을 배달하거나 집에 초대해 함께 먹는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임.
- 가족 수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 이웃과 함께 먹거나 배달해주는 서비스, 원하는 메뉴를 공동 예약해 함께 모여 식사하도록 하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음.
-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해 사용자가 직접 시간과 장소 등을 골라 참여할 수 있어,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부류를 뜻하는 소위 'lunchwith족'을 대상으로 식사시간을 활용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등장함.
- 공유경제와 협력적 소비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는 소셜다이닝은 대안적인 먹거리와 식생활 운동을 통해 '밥상살림' 운동을 사회화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둔 각 영역별 준비 상황

-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단위 협동조합과 연합회의 설립과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 될 전망이며,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협동조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협동조합총연합회 건설이 현실적 과제로 등장함.

| 구분                    |                  | 내용                                                                                                         |
|-----------------------|------------------|------------------------------------------------------------------------------------------------------------|
| 관<br>련<br>동<br>주<br>체 | 한국사회적기업<br>중앙협의회 | 약 1/3정도가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의사를 밝힘.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조사하면서 협동조합 전환을 함께 논의 중.                                             |
|                       | 한국주거복지협회         | 협회가 운영하는 2개의 주식회사인 에너지복지센터, 웰하우징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 함.<br>자활집수리공동체 80여개 중 3개 정도가 전환을 준비 중.                       |
|                       | 신나는 조합           | 취약 계층 창업에 금융지원 지원을 하면서 협동조합에 관한 공부를 진행 중. 주식회사 중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곳이 있음.<br>전문가 협동조합(변호사, 회계사 등)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 |

|          |             |                                                                                             |
|----------|-------------|---------------------------------------------------------------------------------------------|
|          | 한국대안기업연합회   | 노협과 소협을 합친 형태의 아파트 서비스 협동조합을 고민 중.                                                          |
|          |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 법에 소액대출과 상호부조사업을 주 사업이외의 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아직 주 사업의 판단기준이 나오지 않아 협동조합 전환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음. |
|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해피브릿지, 성남자활 등과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컨설팅 중.                                                           |
|          | 한국의료생협연합회   | 기본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해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함.                             |
|          | 협동조합기본법연대회의 | 협동조합 교육 및 설립지원,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과 조직적 통합 방안 모색.                             |
| 관련 행정 조직 | 정부(기재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8월에 국무회의 통과시키고, 9월에 시행규칙, 지침을 제정하는 일정으로 추진 중.                                  |
|          | 서울시         | 7월 협동조합주간 행사 때 협동도시 서울 선언을 함. 시청 공무원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학습 독려.<br>세계협동조합의해 한국조직위원회와 MOU 체결         |
|          | 전북          | 협동조합스쿨을 만들. 10월에 지역순환에 초점을 둔 국제포럼을 개최 예정.                                                   |
|          | 노원구         | 구청에 협동조합 지원을 하는 공무원 채용.                                                                     |

## ● 일본 협동조합계의 '협동조합헌장' 초안 정리 소개

- 협동조합헌장 초안의 작성 배경
- 일본은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조직 대표자와 전문가, 활동가 등으로 전국실행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기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존재가치를 협동조합인 스스로 재확인하고,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인지도를 높이며, 정부에 대해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를 충실히 마련토록 지침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협동조합헌장 초안을 작성하게 됨.
- 헌장 초안의 주요 내용
- 협동조합의 이념은 세계 전체로 확산되어 현재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92개국의 협동조합과 약 10억 명의 조합원을 가진 세계 최대의 국제NGO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그동안 협동조합은 주로 농림수산업, 상공업, 금융, 공제, 소비생활 등 경제영역에서 활동해 왔으나, 최근에는 조합원을 위한 공익적 활동만이 아닌 의료, 복지, 보육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전반의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음.
- 관련해서 '전문'과 '기본이념', '정부에 대한 협동조합정책의 기본원칙과 행동지침', '결론', '부속문서'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헌장 초안은 협동조합을 포함한 민간의 비영리

부문이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하고 만들어 가는데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장 초안에는 협동조합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조직들과 연계', '행정과의 협력 촉진'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첫째, '협동조합간의 연대 강화'와 관련하여  
일본 내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이 하나가 되어 현장 초안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음. 향후 현장 제정운동에 있어서도 연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
- 둘째,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의 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것을 전제로 정부에 대한 정책요청을 하며, 협동조합, NPO, 중소기업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직들(CBO)과 연대해 나감.
- 셋째,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을 수립'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할 것',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존중할 것', '협동조합의 자치와 자립을 존중할 것', '협동조합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중시할 것', '협동조합을 사회경제 시스템의 유력한 구성요소로써 위치시킬 것' 등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함.

## 분야별 동향 3

## 사회 · 환경

## ● 성과보다 한계와 과제를 드러낸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

- 지난 20년간의 지속가능발전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가 지난 6월 20일부터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됨
- 이번 회의(Rio+20)에서는 190여 개국 지도자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경제계,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여 녹색경제와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의 마지막 날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정상선언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채택함.
- 유엔 회원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목표 설정과 UNEP(유엔환경계획)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효력을 상실한 '국내총생산'(GDP)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표 개발에 착수하기로 함.
-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위한 10년 계획을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계기를 마련함.
- 하지만 이번 Rio+20 회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음.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정상선언문 제목과 달리 회의 결과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래'를 담고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됨
- 경제위기와 생태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서 비롯된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고, 후쿠시마 사태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어, 현실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런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민간 주체들은 Rio+20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촉구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중 선언'(Peoples Sustainability Manifesto)을 별도로 작성하여 발표함.
- 민중 선언은 지속가능성 원칙이 강조하는 '세대내 형평성', '세대간 형평성', '생태적 형평성'을 통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보다 분권화되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계관과 가치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하며, 따라서 새로운 윤리와 가치, 영성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경제와 사회, 환경 영역이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발전해 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정부가 해 온 녹색성장 논리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함.

- 정부는 이번 Rio+20 회의를 그동안 추진해 온 '녹색성장'(Green Growth) 전략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장으로 삼고자 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음.
- 심각한 가뭄으로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환경파괴와 세금낭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가뭄과 홍수 극복의 모범 사례로 선전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그대로 둔 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임.
- 결국 세계적 경제위기,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가격 폭등,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등으로 기존의 성장체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함.
-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녹색성장 개념과 전략은 폐기하고 보편적 개념으로 자리 잡은 '지속가능발전'의 본래 의미를 분명히 하여 실천 체계를 다듬어나갈 필요가 있음.
- 유엔의 권고로 만들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정상화 하여 지금의 '녹색성장위원회'는 폐기하거나 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축소 통합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국책형 개발사업들에 대한 견제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함.
- 또한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 영역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살려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실행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변화

- 작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됨.
- 생활주변 방사선은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선이 아니라,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오는 우주방사선,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지각방사선,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등 자연방사선을 말함.
-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피할 수 없지만, 방사선 피폭에는 안전치가 없는 만큼 가능하다면 자연방사선도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선량은 세계 평균치인 2.4mSv보다 높은 3.08mSv로, 이번 법안 시행으로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자연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음이온 온열매트, 건강 팔찌 등 건강보조용품과 내화벽돌, 복합비료, 석고보드, 담배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자연 방사선에 피폭되는 것을 관리하고, 작업장에서는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나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승무원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됨.
- 한편 법 시행 이전에 수입된 원자재나 가공제품들은 감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성

에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작년 노원구 아스팔트 방사성 물질 검출 사건처럼 인공방사선에 의해 생활주변이 오염될 경우도 규제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인공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안 손질도 요청되고 있음.

## ●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 에너지 산업계의 변화된 흐름<sup>2)</sup>

-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세계 핵산업계가 극심한 침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남.
- 지난 7월 6일 발간된 '세계핵산업동향보고서 2012'에 따르면 현재 세계 핵발전소는 429기, 364GW로 나타남.
- 이는 핵발전소가 가장 많았던 2002년 444개보다 15개가 줄어든 것으로, 세계 전력 생산에서 핵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3년 17%에서 2011년 11%로 하락함.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 전 해(2010년)에 비해 4.3%가 줄어듦.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규발전소보다 폐쇄되는 발전소가 더 많음
- 현재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4개국은 탈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집트, 이탈리아, 요르단, 쿠웨이트, 태국은 핵발전 프로그램을 더 이상 시도하지 않기로 함.
- 이런 가운데 이란이 새로운 핵발전 국가로 등장하여, 현재 31개국이 핵발전을 하고 있음. 이중 6개국(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이 세계 핵전력의 70%를 생산하고 있음.
-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7기의 원자로가 추가로 건설되는 동안 19기가 폐쇄됨.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지난 7월 5일 오이 3호기를 가동했고, 곧 1기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임. 하지만 나머지 핵발전소의 재가동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실정임.
- 미래가 불투명해진 핵발전 산업
- 현재 세계적으로 59개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임. 이 중 18기는 수십 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41기는 지난 5년사이 건설은 시작했으나 완공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임.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3/4은 중국, 인도, 러시아 지역임.
- 핵발전소 건설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유럽의 경우 건설비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 10년 동안 4배가 늘어남.

2) 세계적 에너지정책 컨설턴트 마이클 슈나이더가 주저자로 참여한 <세계핵산업동향보고서 2012>(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2) 중에서 정리.

- 최근 들어 신용평가기관들이 핵발전 건설과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정부지원 감소 등을 이유로 관련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음. 지난 5년간 세계 11대 핵산업 관련 기업 중 7개 사가 S&P사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되었고, 상향된 기업은 없음.
- 후쿠시마 사고를 낸 동경전력은 사고후 2007년 당시 주식평가액의 96%를 상실함.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세계 최대 핵발전소 운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 주식의 가치도 82% 하락했고, 세계 최대 핵발전 시공업체인 아레바(AREVA) 주식 가치도 88% 하락함.
- 오히려 지멘스사 등 핵발전 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투자를 철회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
-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의 급증
  - 세계 핵발전 설비 용량이 줄어든 반면, 풍력은 41GW 늘어남. 중국의 경우 핵발전 용량이 1.5배 증가한 반면 풍력과 태양광 설비용량은 5년 사이에 50배 가까이 증가함.
  - 2000년 이후 EU의 핵발전 용량은 14GW가 줄었고, 천연가스는 116GW, 재생가능에너지는 142GW가 늘어남.
  - 2004년에서 2011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된 총액은 1조 달러인 반면 핵발전 투자는 1200억 달러로 나타남.
  - 독일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갈탄(153 TWh)에 이어 재생가능 에너지로 인한 전력 생산이 122 TWh로 2위를 차지하여, 석탄(114.5 TWh), 핵발전(102 TWh), 천연가스(84 TWh)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발전 산업은 환경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현재 핵산업계의 남은 생존 전략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달려 있음.

## ● 에너지 위기 시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 노력이 필요

-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과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범사회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5%를 수입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710억 달러에 이룸.
-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오일 피크 등으로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에너지 수입에 따른 비용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원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7월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발전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정부는 2003년부터 10년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총 5조 81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1차 에너지 생산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61%에 불과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임.
- 현재 보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2010년 기준으로 폐기물이 70.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수력(11.6%), 바이오(11%), 풍력(2.6%), 태양광(2.4%), 연료전지(0.6%)의 순임. 따라서 앞으로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풍력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 가 | 신 재생 에 너 지 발 전 계 획                                                                                          |
|-----|-------------------------------------------------------------------------------------------------------------|
| 한 국 |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에 진입,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확대                                                     |
| 일 본 | 20년간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1kW를 42엔에 사들이는 '기준가격 지원제도(FIT)'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간 원전 3개의 발전용량에 상당하는 3.2GW규모의 태양광 전력을 추가로 생산 |
| 중 국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로 확대                                                                                  |
| 인 도 | 2022년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체 전력의 15%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조달하도록 규정                                                         |
| 호 주 | 2020년까지 호주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                                                                    |
| EU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20%로 확대하기로 결정함. 특히 독일은 2020년까지 35%를, 2050년까지 80%를 신재생에너지로 교체                     |
| 미 국 |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 2025년 전력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

분야별 동향 4

## 정치·사회운동

### ● 한·일 군사협정과 동북아 평화 문제

- 지난 6월 26일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한·일 군사협정' 추진 소식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킴
- 이날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초의 한·일 군사협정 즉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로 의결함.
-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가운데 국회에 대한 설명 없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한·일 군사협정'을 두고 헌법 절차를 무시한 밀실 처리라는 논란이 제기됨.
- 여기에도 협정문 내용 공개 요구에 대해 정부는 일본 각의에서 통과되고 서명이 완료된 후에야 공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더욱 확대시킴.
- 결국 정부의 한·일 군사협정 체결 움직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6월 29일에 한·일 양국의 서명 약속 1시간을 앞두고 협정에 대한 서명을 전격 보류한다고 발표함.
- 하지만 정부는 절차상 미숙함에 대해 사과를 발표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한·일 군사협정을 재추진할 뜻을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음.
- 동북아 평화의 관점에서 한·일 군사협정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
-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해 온 정부는 일본의 앞선 정보력과 첨단 군사기술을 활용하여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와 1개 국제기구(NATO)와 군사정보보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군사협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를 거친 데다 종군위안부나 독도영유권 문제를 두고 지금도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를 식민통치 했던 국가에게 군사비밀을 주는 것 자체가 국민정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하지만 한·일 군사협정의 추진 배경에는 한국과 일본을 군사협력의 파트너로 삼아 북한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진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한·일 군사협정 추진이 급속히 세력을 확대해가는 중국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사이의 긴장과 갈등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 속에서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의 균형자적 역할로 자리매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일본 자위대의 정보력을 활용해서 북한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 자체도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나아가 그동안 일본 내 평화운동세력과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견제로 '평화헌법' 제 9조를 통해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견제해 왔으나, 근래에 들어 일본 사회의 혼란 속에 우익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핵 군사력 보유 선언' 등 군사대국화를 향한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만큼,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일본군국주의 부활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음.

## ● 끊임없이 불거지는 지리산 '케이블카' 및 '댐' 건설 논란과 갈등

- 최근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건설 계획에 대한 부결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이 사업을 재신청하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지난달 26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제외한 지리산과 설악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모두 부결시킴.
- 지자체들이 제출한 육상 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환경부가 지난 2월 마련한 '국립공원 내 삭도 시범사업 검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불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환영 입장을 밝힘.
- 하지만 환경부가 재심 절차 진행 가능성을 남겨둠으로써 구례군, 함양군 등 지자체에서는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수정해 재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음.
- 지리산 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불거지고 있음
- 경상남도 환경단체를 비롯한 종교단체,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 등은 문화재청이 함양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함양군과 산청군의 지역단체 대표와 지역주민들은 용유담 명승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 용유담이 명승으로 지정될 경우 지리산댐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고, 지리산댐 건설 시 주변 환경훼손 및 지리산국립공원 일부가 수몰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됨에 따라 판결을 앞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 4대강 사업의 완결판? 두물머리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

- 4대강 사업의 개발 바람 속에서 유기농지를 지켜 온 두물머리,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 집행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4대강 사업 진행에 따라 전국 하천 용지의 비닐하우스 3만3162동 가운데 현재 두물머리에 있는 37동만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음.
- 4대강 사업과 유기농지 강제수용 반대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두물머리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텃밭 농사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3일자로 양평군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두물머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낸 '토지경작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음.

- 이에 두물머리 농민과 활동가들은 상징적인 '승소' 판결로 받아들이고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경작지에 대해 다음달 8월 6일로 행정대집행을 통보함.
-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책정된 예산이 소멸되어 재집행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며, 국토부 측에서는 연내 완공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공사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음.
- 따라서 농민과 공동대책위는 물론 현장에서 3년째 생명평화미사를 올리고 있는 '4대강 사업 저지 천주교연대'는 대규모 미사 등을 통해 강제 집행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음.

## ● 우리나라의 원전 재가동 움직임과 탈핵(탈원전) 관련 동향

- 고리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음으로써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어 수명이 만료된 핵발전소로, 잦은 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을 불안감이 특히 높았던 곳임. 특히 고리 1호기 반경 30km내에 37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어 그 불안감은 특히 더 큼.
- 고리 1호기는 정전사고 은폐라는 사상초유의 사고를 겪었음에도 진상규명과 안전성 평가 등이 명확히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가동 절차를 밟아 왔음. 여기에서 원전시설에 대한 납품 비리로 한수원 간부 22명이 기소됨으로써 원전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조직들 자체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결국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논란의 핵심 대상이었던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기에 이룸.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명칭과는 달리 '안전' 보다는 '경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7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에 대해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부산시민 72.4%가 고리 1호기 재가동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재가동 절차에 있어 부산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72.0%로 나타났다고,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해서도 66.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7월 17일 부산고법 민사8부는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항고심 세 번째 심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에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어떻게 문제가 없어 안전한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함.
- 법원의 이러한 주문은 정전사고 은폐로 가동을 중지했던 고리 1호기에 대해 IAEA 전문

가 안전점검단의 점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음.

- 하지만 정부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원전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최근 연이은 폭염과 전력 사용량의 급증을 이유로 8월 2~3일에는 고리원전 1호기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어린이원자력뮤지컬을 둘러싼 논란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012년 6월 13일부터 6개 지역에서 총 48회 공연 예정으로 어린이 뮤지컬 "손오공과 함께 떠나는 원자력이야기" 공연을 추진해 옴.
- 그동안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어린이뮤지컬은 각 핵발전소 인근 지역 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형식으로 진행해 왔었으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어린이집 관람 취소가 이어지고 있음.
-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어린이 원자력뮤지컬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연의 홍보 과정에서 부산시교육청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음.
- 문제는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3.7%씩을 떼서 만든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에서 원자력문화재단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임. 올해에도 8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핵발전 홍보에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국민 세금으로 일방적인 원자력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존립과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과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음.

#### - 기타 탈핵 관련 동향

-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창립: 7월 13일, 통합진보당 김제남 정진후 의원, 민주통합당 김현미 이미경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종교사회단체, 법조계 인사들이 함께 하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창립총회를 개최.
- 대선 국면에서 탈핵 이슈가 주요 의제로 등장 : 문재인인의 '탈원전·생태성장 에너지 구상', 김두관의 '2040년 원전 제로 국가 선언' 등 예비 대선후보들이 '탈원전'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주요 정책 이슈 중 하나로 탈핵이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 일본 사회 시민들의 탈핵(탈원전) 활동

- 현재 일본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서 탈원전을 외치는 집회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탈원전 집회에는 강연이나 세미나, 콘서트, 서명운동 등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참가 주체도 환경단체나 지역단체 네트워크, 개인, 동아리 등 다양하고,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 탈원전 집회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향후 일본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특히 지난 7월 16일 일본 도쿄 요요기 공원에는 시민 17만 명이 결집하여 한목소리로 탈원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음
- 이번 '7.16 안녕 원전 집회'는 지난해 9월 19일 6만 명이 모여 탈원전을 외친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로, 일본 사회에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은 1960년 마일 안보조약체결 반대시위 후 5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임.
- 몹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노동조합, 농민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각 영역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는 끊임없는 행렬을 이어가며 "우리 아이를 지키자", "도쿄전력은 배상하라"는 구호를 외침.
- "원전 사고 전까지 쌀과 야채를 재배했다. 하지만 사고 후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어 우울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원전 반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가졌다"는 농민, "오늘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버스를 탔다. 조용히 있으면 원전 추진과 재가동을 인정한 것이 되어 버린다"는 여성의 말에서처럼,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그동안의 무력감을 털고 원전 폐기와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힘.



## 살 · 림 · 의 · 말

**‘매장’에 관한 명상****파는 곳과 나눔터 사이, 한살림매장의 의미**

“왜 이렇게 대파가 시들시들해요?” “레시피도 없는데 물건만 팔면 뭐해요?” 조합원님들의 핀잔이 거침이 없습니다. 시시콜콜 캐묻습니다. 어떤 조합원은 아예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한살림매장의 풍경입니다. 조합원에게 매장은 무엇일까요? 매장에 들러 먹을거리를 구입하고, 새로운 소식을 얻고, 햇살모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가끔은 생산자 얼굴도 봅니다. 어쩌면 한살림운동은 매장을 통해, 매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한살림과 오랜 시간을 교류를 해왔던, 정확히 말하면 한살림의 중요한 롤모델이 되었던 일본 그린코프생협에서 한살림서울의 매장을 견학하러 왔었다고 합니다. 놀랄 일입니다. 왜? 무슨 볼 것이 있다고?

**일본 그린코프생협이 한살림매장을 보러온 까닭은?**

한살림운동의 역사는 사실 매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86년 12월 서울에 제기동에 문을 연 ‘한살림농산’이라는 조그만 쌀가게도 일종의 매장이었고, 원주와 강릉, 경남과 대구 등 각 지역의 한살림도 사업과 활동의 출발점은 매장이었습니다. 이후 공급소, 위탁매장, 직영매장 등을 거쳐서, 1998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매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37개의 한살림매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엿그제 서울 상암매장이 개장식을 가졌고 8월 초에는 충남 당진과 전북 익산에서 한살림매장이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괴산과 부여 같은 농촌지역에도 매장이 생겨 생산자 주도의 매장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급액의 70% 정도가 매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매일 2만 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매장을 찾고 있으니 정말 매장은 명실상부 한살림운동의 중심입니다.

**매장은 생명순환의 핵심적 연결고리**

매장은 조합원에게도 중요하지만, 생명사상과 대안경제의 관점에서도 의미심장합니다. 한살림 협동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과 소비의 협동, 도시와 농촌의 협동, 생산자/소비자 공동참여형 협동조합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의 배경에는 ‘생산-유통-소비-재생’이라는 생명순환의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단절을 대안적 ‘교환(유통)’을 통해 이어주고, 폐기가 아닌 ‘재생’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살림매장은 생산과 소비를 매개하고, 교환과 재생을 연결해주는 생명순환의 핵심적

인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매장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와 전산부서 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장이 '교환의 손발' 역할이라면 물류센터는 '교환의 심장', 전산부서는 '교환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한살림매장은 지역으로 확장된 공동체공급

한살림매장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상권(商圈)이 아니라 생활권(生活圈)에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장의 규모도 2-30평 내외의 소박한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한살림'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거꾸로 이것이 한살림매장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생활협동은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협동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의 일부 '마트형 생협'과는 전혀 다른 방향과 전략입니다(최근 보고에 의하면 불황기의 돌파구로 만들어졌던 일본 일부 생협의 대규모 마트형 매장들은 대부분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한살림매장은 '지역으로 확장된 공동체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합원 공동체에 기초한 '공동체매장(community based shop)'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장공급'이란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살림매장은 조합원의 공동체센터에서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체센터', '지역살림센터'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마을과 지역의 살림살이를 의논하고,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대응하는 대안사회의 네트워크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파는 곳'과 '나눔터' 사이에 숨겨져 있는 호혜의 마음

"새로운 세상은 언제 옵니까?"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해월(海月) 최시형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바닥에 비단이 깔릴 때." 김지하 시인은 '시장의 성화(聖化)' 혹은 '거룩한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 그 '비단'이 물품 안에 담긴 '고귀하고 거룩한 마음'이라면 한살림매장에는 벌써 비단이 깔려있는 셈입니다.故박재일 회장님이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약속했던 그 마음,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사는 형편을 헤아리며 서로가 믿고 돕는 한살림"이 담겨있으니까요.

곳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한살림매장 간판을 자세히 보면 한켠에 "생명의 먹을거리 나눔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매장은 원래 판매장의 줄임말이니 한살림매장은 분명 '파는 곳'이 맞습니다만, 동시에 '나눔터'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자와 양파와 라면을 화폐(돈)를 매개로 '사고팔기'는 하지만(상품교환), 그 이면에는 생산자회원과 소비자조합원이 서

로의 마음과 인격, 믿음과 스토리를 '주고받는 관계'(호혜)가 숨어있습니다.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한살림매장은 '밥/쌀(물품)'을 매개로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이 만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고, 농촌과 도시가 만나고, 소비협동과 생산협동이 만나는 진정한 '나눔터'입니다. 즉 매장이면서 매장이 아닙니다. 이름 하여 '호혜시장', 호혜와 시장이 만나 '비단 깔린 장바닥'이 됩니다. 바로 여기, '매장'과 '나눔터' 사이에 한살림세상의 비결이 숨겨져 있는 지도 모릅니다.

## 한살림매장은 '이어주고 살리는 곳' 입니다

그렇지만 매장(파는 곳)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매장은 매장이되 '매장(賣場)'이 아니라 '매장(媒場)', 즉 중매 서고 매개하는 곳 말입니다. 한살림에서도 초기에 '공급소'라고 쓰기도 했습니다만, 일본 생협에서 쓰는 '데포(depot)'라는 말도 원래 중계소 혹은 정거장이란 뜻으로 공급거점을 의미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매출이란 말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호혜의 관점에서나 조합원/생산자 내부 거래라는 관점에서 '이바지할 공'(供), '넉넉할 급'(給)의 의미를 담아 '공급액'이라고 해야 좋습니다.

한살림매장은 '파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살림의 관계로 '이어주는 곳'입니다. 자본주의와 산업문명에 의해 단절된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자기와 우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장(媒場)은 곧 '나눔터'이고 '살림터'입니다. 한살림매장은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위한 한살림운동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마을마다 골목마다 아파트마다 한살림매장이 문을 열어 한살림공동체의 호혜적 그물망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 ◆ 한살림매장에 가면 ◆

조합원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생산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살아있는 먹을거리와 소박하고 단단한 생활용품이 기다립니다.

기후변화와 우리 아이의 미래를 토론합니다.

협동조합 만드는 법을 고민합니다.

새로운 레시피와 도시농업을 배웁니다.

재활용병과 헌옷을 모아둡니다.

오랜 만에 만난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살림의 길이 보입니다...



##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3호

**발행일** 2012년 7월 27일

**발행인** 박맹수

**발행처** 모심과살림연구소

(100-412) 서울시 중구 광희동2가 360번지 동훈빌딩 5층

<http://mosim.or.kr>